

특별기고

전남·경남, 기후변화 대응 이끈다



이범우

전남도 기후생태과장

지난해 10월 18일 우리 정부는 COP28 유치를 아랍에미리트(UAE)에 양보한다고 발표했다. COP28 남해안 남중권 개최를 위한 지난 13년간의 노력이 물거품된 순간이다. 그 소식은 안타깝고 아쉬웠지만, 다행히도 정부는 COP33 유치 결정을 밝혔다. 이에 우리 전남은 포기하지 않고 경남도와 협력해 다시 도전하는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COP33 공동 유치 재도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는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최고의 의사결정 기구다.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하고, 지구온난화와 이상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1992년 UN환경개발회의(리우)에서 채택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가입한 당사국이 매년 협약 이행 방법을 논의하는 국제행사다.

당사국 196개국과 유럽연합(EU), 국제기구, 시민단체 등 3만여명이 참석한다. 유엔 3대 협약 중 하나이며 환경 분야 행사로는 세계 최대 규모로, 매년 11월에서 12월에 약 2주간 진행된다.

여러 국가가 개최할 수 있도록 5개 대륙별로 돌아가며 개최 중이며, 아프리카, 아시아·태평양(28년), 동유럽, 남미·캐리비안, 서유럽·기타 순이다. 우리나라는 아시아·태평양 그

룹에 속하며, 2028년에 개최될 COP33 유치를 준비하고 있다. 개최국 결정은 2026년이다.

전남도와 경남도는 COP33 개최를 위해 남해안 남중권이란 이름으로 다시 뭉쳤다. COP33을 개최하고자 하는 지역 중에서 남해안남중권은 가장 유력한 후보지라 할 수 있다.

그 이유를 크게 3가지로 나눠 설명하면, 첫째, 남해안 남중권은 다양한 기후변화 이슈를 논의할 최적의 장소다. 한려해상 국립공원, 랍사르 습지, 지리산 국립공원 등 다양한 기후 특성이 공존한다.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에 따르면 지구온난화, 해수면 상승 등 기후변화의 시작점이자 가장 취약한 지역으로 아열대 기후변화에 가장 빠르게 변할 곳이다. 또 이 지역은 국내 최대 석유화학(여수) 및 철강산업(광양), 화력발전소(하동) 등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이 밀집해 있어 탄소중립이 절실한 곳이다.

둘째,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사무국이 제시하는 시설기준 요건인 회의장, 숙박시설, 교통 여건 등이 잘 구축돼 있다. 2012 여수 세계박람회장은 COP33 회의장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 관광지도 많아 충분한 숙박시설(기준보다 1만3천실 이상)을 보유하고 있고, 공항과 KTX역이 있어 참가자들이 쉽게 방문할 수 있다.

셋째, 국가균형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다. 환경 분야에서 최대 규모 행사인 COP33을 공동 개최함으로써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지역경제와 마이스 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COP28 유치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광주전남연구원)'에 따르면 1천583억원 생산유발효과 발생하며 영·호남 공동협력을 통해 동서 화합을 이룰 수 있다.

남해안 남중권에서 COP33을 유치하기 위해 전남도에서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 우선 COP33 유치 기반 마련을 위해 '지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지역을 기후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또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광양만권을 저탄소 산업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탄소중립 특화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영호남 협력을 통한 개최 분위기를 조성하고, 도민 주도로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을 추진하고자 전남기후환경네트워크, 한국탄소산양관 등 36개 사회단체와 협력해 캠페인도 전개하고 있다.

지역민 관심과 지원 필요

생활속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운동, 적정 실내 온도를 유지하는 쿨맵시·온맵시 캠페인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남해안·남중권만의 독자적인 유치전략 마련을 위해 연차별 세부 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외 유치 확보를 위해 이클레이(ICLEL), 도시환경협약(UAE) 등 국제기구와도 지속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들도 지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지가 없다면 소용없다. 세계 최대의 환경행사인 만큼 도민 여러분들이 일상 생활 속에서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모두의 염원과 응원을 담아 COP33이 남해안 남중권에서 멋지게 개최될 미래를 그려본다.

기고

50+ 장년층 시민, 가을을 당당하게 즐겨라



정찬기

광주시 빛고을50+센터장

100세 시대 나의 앞날에 소중한 나침반이 된다.

장년층 세대 특징은 앞으로 15년 내지 30년이 될 기간을 지탱할 다양한 삶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고 세상을 보는 명쾌한 관점의 삶의 지혜와 유연성을 겸비하고 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지성과 감성의 교차점인 중년으로서 세대 지속성을 유지해야 할 책임감 또한 있다.

여기에 인생 2막은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깊은 통찰과 구속 받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하려는 욕구와 끝이 아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 또한 갖고 있다.

인생 마라톤은 성적을 매겨 1, 2, 3등에 메달을 주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반점점을 들고 있는 시점에 진단이 필요하다.

현재와 15년 후, 30년 후에 내 옆에 누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지도도 그려 보면서 장년의 인생을 촘촘하게 살펴보는 시민이 됐으면 한다.

가을은 비워야 채워진다고 했다. 오늘 장년의 길목에 선 나는 무엇을 비워야 채워지는 삶을 살 수 있을까도 고민해 보고 채울 수 있는 것도 장년의 나이에 걸 맞는 것을 염심해 채우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

장년층은 두렵고 걱정되는 고령, 초고령 사회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재단장의 시기가 확대되는 시간에 와 있다고 생각하면 어떨까.

여기에 안정맞춤형 인생지도 그리고 그 지도 위에서 당당하게 내 인생 보람과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힘차게 가을 인생을 즐기는 가을 남자 가을 여자가 됐으면 한다.

필자 역시 장년의 나이이다. 장년의 시간을 어떻게 살고 싶다는 마음을 졸자의 시로 남기고 후회 없는 결실을 맺으려 최선을 다하며 살고 있어 외람되지만 옮겨본다.

'가을이 오기 전에'란 시다.

'가을이 오기 전에 할 일이 있다. 지난 여름 무성히 자란 생기의 가치를 잘라내는 일과 옥망의 무게를 부려 버리고 가을로 서 있을 수 있는 나무를 가꾸는 일이 있다. 한 그루 나무를 가꾸는 일과 나무처럼 스스로를 가꾸는 일은 둘이면서 하나다. 하나가 되어 하나로 서 있을 수 있는 가을, 그 가을의 한 그루 나무이고 싶다.'

이렇게 물욕의 삶보다 정신적 건강을 중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하고 우리 사회가 환경을 만들어 준다면 인생 2막과 3막, 풍요의 마음으로 희망가 속에 살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다소 늦었지만 끝으로 '내일이 빛나는 기회 도시 광주'를 시정 비전으로 한 민선8기 광주시장은 취임사를 통해 50+세대에게 희망을 품게 했다. '50+세대는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디자인할 학습과 경험의 기회를 제공해 자신의 삶이 빛나고 내일이 빛나는 광주가 되게 하겠다'고 밝혔다.

광주 장년층 시민이 그 꿈의 기회를 학습하고 준비하는데, 우리 빛고을50+센터가 운영하는 인생학교, 노후준비카데미, 사회참여프로젝트, 50+트렌드 특강, 취업코칭과 상담의 날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해 보다 활동적인 장년의 시간, 보람과 행복이 넘치는 인생 2막을 보냈으면 한다.

사설

'브랜드 가치 제고' 자치구 명칭 변경 의미

광주시가 방위명으로 지어진 각 자치구의 이름을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강기정 시장이 최근 인천 미추홀구의 사례를 들며 자치구 명칭 변경 의사를 밝혀 관심을 받았다. 미추홀구는 인천 중부에 위치한 자치구로 인천의 옛 이름을 본떠 붙여진 명칭이다. 인천시가 2015년 12월 명칭 변경을 추진한 이후 주민들의 설문조사를 실시해 2018년 7월부터 사용했다.

강 시장이 자치구 명칭 변경을 거론한 것은 민선 7기에서 추진한 자치구 간 경계조정이 정치권과 주민들의 이해에 부딪혀 진척이 없자 구 명칭 변경을 포함해 인구와 재정, 생활 인프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할 것을 제안하면서 나왔다. 지역 국회의원과 5개 구청장, 시의회 의장, 교육감 등이 참석해 취지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방위명에 따른 자치구의 명칭은 일제시대의 잔재로 시대적 흐름을 좇아 새롭게 '예쁜 이름'으로 변경하는 안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자치구 경계조정 등 행정구역 개편 관련 논의가 진전이 없

는 상황에서 하나의 축매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지하는 것처럼 광주에서 1973년 동구와 서구, 1980년 북구가 형성됐고, 1988년 광산군이 광주로 편입되면서 광산구가 생겨났다. 또 1995년에는 남구가 추가 설치되면 서동·서·남·북·광산 등 5개 자치구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갈수록 택지개발이 이뤄지고 거주지가 확장되면서 인구 비대칭, 도심 공동화, 각 자치구의 불균형이 심해져 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경계조정을 시도했지만 무위로 돌아갔다.

향후 자치구 명칭 변경을 위해서는 대상지의 실태조사를 비롯해 기본계획 수립, 지방의회 의견 수렴, 중앙부처의 심의 결정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주민등록상의 일제 정비와 건축물 등의 정리가 뒤따라야 한다. 허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지 주민들의 수용성이다. 자치구 간 심각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정체성,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면 주민들을 설득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전남 숙박·관광단지 조성 적극 대처해

전남지역에 들어설 예정인 대규모 숙박시설과 관광단지 주민 민원 등에 발목잡히면서 체류·휴양형 관광 활성화에 차질을 빚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현재 여수, 해남, 진도 등 도내 곳곳에서 리조트, 호텔 등 조성사업이 진행 중이다. 진도에서는 ㈜에드가진도가 녹진관광지 사업에 뛰어들어 2024년까지 군내면 일원 8만4,000㎡ 부지에 510실 규모의 숙박시설을 조성한다. 사업비는 2,260억원 규모다. 해남에서는 30년간 담보 상태였던 오시아노 관광단지가 첫발을 땀다. 한국관광공사 2025년까지 회원주 주광리 일원 507만3,000㎡ 부지에 1조1,913억원을 투입해 마리나, 골프장 등을 건립한다.

그러나 이외 상당수 사업들은 주민 민원에 발목 잡히는 등 차질을 빚고 있다. 국내 최대 체험형 테마파크를 표방한 여수 첼린지파크 관광단지가 대표적이다. 사업시행자인 여수첼린지파크관광㈜은 2025년까지 화양면 나진리 51만㎡ 부지에 2,308억원을 들여 호텔, 빌리지, 청소년수련시설 등을 건립

할 계획이다. 하지만, 인근 가막만 어업인과 주민들이 피해 대책과 배상을 요구하고 있고, 업체측도 고발로 맞서면서 빠른 사업추진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태다. 진도 대명리 조트 2단계 조성은 사업기간이 크게 연장됐다. ㈜대명레저산업은 의신면 일대 55만 9,000㎡ 부지에 3,508억원을 들여 호텔, 산림체험학습관 등을 구축한다는 계획이지만, 토지 매입을 두고 지역민들과 갈등이 지속되면서 애초 올해까지던 사업 기간이 2025년으로 늘었다.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개발은 시행사인 미래에셋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법대출 관련 조사를 받으면서 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 여수 화양 복합관광단지도 토지민원 등으로 개발 계획이 대폭 축소됐다.

도내 각지에서 추진중인 숙박시설과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전남이 체류형 관광의 메카로 발돋움하기 위한 필수 요소다. 기업 유치를 위해 들인 행정력과 발품도 만만치 않다. 주민과의 갈등 봉합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시급해졌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쇠신 우선돼야

기지수첩



오지현

경제부 기자

다. 과연 대형마트와 시장은 동일선상에서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가, 사실 그렇게 보기 어렵다.

이 질문이 성립한다면 대형마트의 매출 감소는 시장 및 지역 골목상권의 매출 증대로 이어져야 한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경제시장에서 모든 것은 성장하고 안정기를 지나 쇠퇴한다. 그리고 이를 결정하는 것은 다름 아닌 소비자다. 현재 유통업계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업태를 중심으로 또 다른 방식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는 대형마트의 등장 후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이 하향세를 걸었던 것과 다르지 않다. 환경과 소매패턴의 변화로 인해 유통업계의 구조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대형마트는 규제 완화에 집착하는 것보다 온라인에 빼앗긴 대형마트만이 가진 경쟁력을 확보해 소비자들의 눈길을 다시 사로잡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시장도 마찬가지로 시장이 가진 메리트가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정부의 '편들어주기식' 정책 수립도 문제다. 진정한 '시장 자율'을 위해서는 쇠락하고 있는 유통체널들을 상생 중심의 다양한 방식으로 쇠신하도록 지원하며 소비자들의 시선을 다시금 끌어올 수 있는 방향으로 수립해나가야 한다. 결국 시장은 소비자가 있어야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소상공인 등 여론 반발에 부딪혀 당분간은 현행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취임 초부터 '시장 자율'을 강조하던 윤 정부는 지난달 '국민제안 톱10'을 통해 '대형마트 격주 의무휴업 규정을 폐지하고 기업 자율에 맡긴다'고 명시하며 대형마트 월 2회 의무휴업 폐지를 지지하고 나섰다.

이에 노동·시민사회·진보정당 공동행동은 지난달 24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제도의 직접적인 관련 그룹인 노동자를 배제한 채 규제심판회의를 열고, 기업의 편에 서 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사실상 결론짓는 윤 정부를 규탄한다"며 단체행동에 돌입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해볼아야 한

Table with newspaper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phone numbers, website, and subscription rates.

Advertisement for Jindo Daily newspaper, featuring the logo and a QR code for subscription.